

No. 2013-35

#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8. 26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난항 예상되는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 개혁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 1 일본경제지표

###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미 금융완화책이 조기에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짐에 따라 약세
- 장기금리 : 주 전반에는 미 장기금리 상승세가 멈춘데다 아시아 주식시장의 불안 등이 겹쳐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하락세, 주 후반에는 주가상승과 엔화약세 등으로 상승세

구 분	8.19(월)	8.20(화)	8.21(수)	8.22(목)	8.23(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1,141.02	1,140.62	1,152.56	1,144.30	1,139.28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97.62	97.70	97.48	98.20	98.98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3,758.13	13,396.38	13,424.33	13,365.17	13,660.55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765	0.740	0.730	0.750	0.765

###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7월 수출은 전월보다 감소한 반면, 수입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1조엔대로 확대
  - \* 對한국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한 가운데, 무역수지흑자는 축소
- 2013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對한국 직접투자 모두 전기보다 증가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3.8			2.6(P)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
對한국 투자	(40)	7.7			9.1			-
소비자물가(전기비상승율,%)	▲0.2(0.0)	▲0.3	0.1	0.3	0.3	0.2	0.0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
엔화 對미달러 환율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환율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주1. (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1차 속보치

###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2012년도 외자계기업동향조사』 경제산업성, 8월23일  
\*출처: [http://www.meti.go.jp/statistics/tyo/gaisikei/result/result\\_46.htm](http://www.meti.go.jp/statistics/tyo/gaisikei/result/result_46.htm)
- 『2013년도 일본산업동향』 미즈호은행, 8월23일  
\*출처: <http://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sangyou/ml043.html>

## ② 주간경제이슈 : 난항 예상되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 □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로드맵으로서 프로그램 법안

-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로드맵인 프로그램 법안의 골자가 8월 21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아베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본격화
- 프로그램법안의 골자는 일본정부의 유식자회의인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가 8월 6일 아베총리에 제출된 보고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를 계획

### □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의 제언

- 사회보장제도 개혁국민회의의 보고서는 사회보장비의 부담을 현역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각 세대가 부담능력에 따라 고통을 분담하도록 제언
-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약 110조엔으로 GDP의 1/4 규모로 보험료나 세원만으로는 급부지출 증가를 충당할 수 없어 국채발행을 통한 차입으로 차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는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부담증가가 불가피함을 강조

### □ 4개 사회보장 분야별 급부와 부담에 관한 재검토

- 골자는 저출산대책, 의료, 간병, 연금 등 사회보장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소비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급부와 부담의 재검토 방안을 망라한 점
  - 현재 사회보장이 고령자에 대한 급부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출산대책을 포함, 2014년도까지 20만명분의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세 증세에 의한 세수증가의 일부(7,000억엔)를 급부에 사용
  - 연간 총액 100조엔을 돌파한 사회보장비 억제책은 급부지출이 크게 증가한 의료·간병 분야가 중심인데, 의료분야에서 고령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강구

### □ 소극적인 개혁안

- 여당내에도 고령자의 부담증가에 대한 신중론이 있고, 관련 단체의 저항 등 재원마련을 포함한 조정에 난항이 예상
  - 의료, 간병, 연금 등 개별적인 제도개혁의 구체화 작업은 자민당 유력의원들과의 유대가 강한 사회보장심의회가 추진하고 있어 법안화 단계에서 핵심부분이 빠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소비세 증세의 향방도 제도개혁의 성패를 좌우
    - 소비세 증세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나 이 역시 불투명하여, 가령 세율인상

폭이나 시기가 재검토되는 경우 제도개혁도 수정이 불가피

- 무엇보다도 이번 각의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시책을 보면 매우 소극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인데, 그만큼 난항이 예상되는 개혁임을 반증
- 연금분야는 개혁의 시기를 제시하지 않고 보류한 채, 연금삭감과 반발을 일으키기 쉬운 수급개시연령 연장이 골자에서 빠짐
- 구미 선진국들이 67~70세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65세로 연장중
- 의료·간병 분야에서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및 간병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을 제시
- 그러나 의료분야에서는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대형 병원으로부터 진료소나 재택의료쪽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하나, 매년 1조~2조엔 규모로 증가하는 의료·간병 급부지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음

## □ 분야별 주요 개혁 내용

### ▷ 의료 분야

- 일본정부는 우선 법률개정이 필요없는 예산조정만으로 실시할 수 있는 70~74세 연령층에 대한 의료비부담을 이르면 2014년도에 인상할 방침임
- 현행 10%(현역 수준의 소득자는 30%)에서 20%까지 인상
- 부담을 늘리는 데 대한 고령자들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꺼번에 20%로 인상하지는 않고, 70세가 되는 사람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공적비용을 삭감
- 재정안정을 위해 시정촌(市町村)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은 도도부현(道都府縣)으로 운영을 이관하되, 그 전에 국민건강보험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대기업의 건강보험조합 부담을 2015년도부터 늘림

### ▷ 간병 분야

- 2015년도를 목표로, 현재 일률적으로 10%로 되어 있는 간병서비스 이용자의 자기부담을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한편,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간병급부대상에서 제외시켜 시정촌 사업으로 이관
- 그러나 간병비 억제책에 의한 공적비용 삭감액은 연간 천수백억엔 정도로, 저소득자의 간병보험료의 경감책 등을 포함하면, 간병 관련 공적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연금 분야

- 사회보장급부지출의 약 절반을 점하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 등 급부지출 억제책을 검토과제로 열거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시기는 명기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는데 그침

### ③ 경제정책동향

#### □ 엔차관, 한·중과의 경쟁에 대응, 일본기업에게 우선적 지원

- 일본정부가 일본기업의 해외사업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엔차관의 운용방침을 전환
  - 일본기업이 수주하려는 안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개도국에 대한 적용금리도 종래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조건을 완화
  - 사업의 채산성이 확보될 때까지 상대국에 상환을 유예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기와 방재 시스템도 지원대상에 추가
- 이는 한국 및 중국과의 경쟁에서 일본기업들의 수주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정책임
  -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기자재의 30% 이상을 일본기업들이 납품토록 하는 조건부 엔차관을 제공해왔으나, 엔차관을 제공한 사업의 수주경쟁에서 한·중기업 등에 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운영방침을 전환기로 한 것
- 일본의 엔차관은 금년도에 전년도대비 19% 증가한 1조 4,600억엔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중 조건부 엔차관은 2,900억엔 정도로 앞으로 더욱 증액시킬 계획
  - 융자조건도 완화하여 현행 최고 0.2%의 우대금리를 일률적으로 0.1%로 인하
  -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일본기업들이 강점을 지닌 의료기기와 방재시스템도 추가하고, 일본기업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기자재 공급기업을 일본 본사만이 아니고 해외자회사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일본기업에 대한 후보안건의 설명회 기간을 단축하고 회수를 늘릴 계획
- 일본정부는 제 1탄으로 동유럽의 몰도바에 약 60억엔의 엔차관을 제공, 자기 공명화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등 첨단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일본기업을 선정
- 조건부 엔차관에 국한하지 않고, 엔차관을 상대국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사용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
  - 대규모 유전 개발과 전력, 도로, 수도 등의 인프라 사업은 통상 운영개시후 일정기간 동안은 적자 계속되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음
  -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일본기업들이 이같은 사업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운영 초기의 적자분을 엔차관으로 보전할 수 있게 함
  - 이제까지는 사업 개시후 바로 상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이 운영비용을 상회하고 계속 흑자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상환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져 일본기업들이 그만큼 참여하기가 쉬어짐

## □ 경제산업성, 동남아 5개국과 국제규격 공동개발

- 경제산업성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과 연대하여 가전제품 등의 국제규격을 공동으로 개발
  - 에너지절약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아시아의 풍토나 기후에 맞춰 일본제품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규격을 개발하여 국제규격 인정기관에 제안
  - 공동개발한 규격이 세계표준이 되는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기업의 시장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에어컨과 냉장고, 태양광패널, 인공관절 등 9개 분야에서 협력
  - 내년 이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 새로운 규격을 제시
  - ISO 등에서 새로운 국제규격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개국이 참가하는 조건으로 최종적으로는 참가국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일본이 동남아시아 5개국을 끌어들이면 새로운 규격을 제안하기가 쉬워짐
- 경제산업성은 먼저 베트남과 냉장고, 에어컨, 인공관절, 전자재의 규격제정에 관한 협력각서를 교환
  - 히타치제작소와 도시바가 참가하는 기준인증혁신기술연구조합으로부터 연구원들을 파견
- 아시국가들과의 연대는 제품의 국제규격에 아시아지역의 특징을 포함시킬 의도에서인데,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는 태양광발전패널을 연안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염분피해에 대한 내구력을 패널의 수명을 측정하는 항목에 추가한 시험방법을 일본이 싱가포르, 태국과 공동개발
-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제규격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법률에 의해 가전 등 에너지절약기준을 정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는 2012년 6월 에너지절약법이 시행
  - 베트남에서는 금년 7월부터 에너지절약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특정 라벨 부착을 의무화함

## 4 일본기업동향

### □ 대일직접투자 10년만에 최저수준

- 외국기업의 대일직접투자(신규)가 감소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신규투자가 10년만에 최저수준
  -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에 의해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아직 공장 및 판매거점 설립 등의 장기투자에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 금년 상반기중 대일 직접투자는 1조 3,903억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8.5%나 감소하였고, 피크였던 2008년 상반기(약 4.7조엔)에 비해서는 70% 감소
  - 외국기업들의 일본철수 움직임도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신규투자에서 철수분을 차감한 순투자는 약간 증가
  - 아베노믹스를 중심으로 한 아베정권의 정책전환에 화답하여 외국투자자금이 일본에 유입된 결과, 상반기 일본주식의 매입초과액이 전년동기대비 16배나 증가한 9조 3,600억엔에 달함
  -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수익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사업거점이나 공장건설로 이어지는 직접투자는 고도의 경영판단을 요하고 이사진의 승인을 얻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 투자해서는 충분한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
- 일본의 M&A 전문기관에 의하면, 일본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상반기중 1,211억엔으로 전년동기대비 70% 감소
  - 동경도가 2016년까지 500개 기업의 외국기업유치를 목표로 하여 「아시아헤드쿼터 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지 약 1년 경과했으나 지금까지 벨기에의 태양광발전소 1개사 유치에 그침

### □ 일본의 임업계, 대아시아 수출로 활로 모색

- 일본의 목재업계가 수출확대에 나섬
  - 금년 상반기중 편백나무(일본명:히노키)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두배 증가, 과거 최고치를 기록
  - 일본 국내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엔저를 발판으로 대아시아 수출에 활로가 열리고 있음
  - TPP교섭 타결로 값싼 해외산 목재가 수입되는 경우 타격이 예상되는 일본 임업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

- 일본산 통나무의 상반기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90%나 증가했는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임
  -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목재산업은 엔고로 배경으로 저가의 미국 및 러시아산 등의 수입증가로 고전을 면치 못함
  - 철근·철골 등 목재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 늘어난데다 인구감소도 가세함에 따라 생산량 급감과 가격 급락이 계속
- 일본 임야청은 2011년 4월 이후 보조금 지불기준을 벌채량에서 산지로부터의 운송량으로 바꾸는 등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을 실시
-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산 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의 목재자급율은 2009년 시점에서 11.9%로 낮은 편인데, 일본산 편백나무는 한국에서 고급 건축자재로 알려져 부유층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맨션의 내장재로 사용됨
  - 중국은 환경파괴와 사막화방지 관점에서 벌채를 제한하고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북미산이나 러시아산이 많았으나 최근 일본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이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데, 일본의 산은 경사가 심하여 벌채작업이 어려운데다, 통나무를 보관할 장소도 협소하여 임도 등의 인프라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일본의 관련협회에 의하면, TPP교섭 타결로 합판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일본산 합판의 수요가 줄어 통나무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처 확보를 위해서도 가일층 수출확대에 주력할 계획

## 5 한국관련워치

### □ 스미토모상사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발전소 건설

- 스미토모상사와 국내 대림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EPC(설계·조달·건설)를 수주
  - 히타치제작소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효율 제고기술「초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 : USC)」을 도입할 계획이며 수주액은 1,300억엔
  -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도 최신기술을 활용한 발전설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최첨단기술을 무기로 신흥국에서 수주확대를 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국영전력회사인 TNB로부터 수주
  - 발전용량은 100만킬로와트로 원자력발전소 1기분에 가까운 규모
  - 2014년 1월 착공, 2017년 10월 완성을 목표
  - 발전비용이 싼데다 에너지효과도 프랑스 알스톰연합과의 경합에서 수주를 따내는 데 기여
- 스미토모 상사와 대림산업은 플랜트기기의 조달과 토목공사, 발전터빈의 설치 등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맡게 되며, 히타치제작소는 대림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터빈과 보일러 등 주요기기를 납품할 예정
  - 스미토모상사와 히타치제작소는 초초임계압 기술을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삭감 등 신흥국의 현지 전력회사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
- 스미토모 상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총 5개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발전용량에서 점하는 비율은 20%를 약간 넘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구형 발전소가 갱신시기를 맞고 있는 외에, 전력수요는 앞으로도 4~5%정도 증가할 전망
  - 스미토모상사와 히타치제작소는 앞으로도 최신테 기술을 사용한 플랜트를 제안하여 수주활동을 전개할 계획